



「정의당 이대론 안 된다」 필자에게

신은정(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

봄호를 통해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말끔히 짚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보면서 이성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뿌리 깊은 구악을 뿌리 뽑기 위해 절대 민주당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총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집 <2020년 총선과 한국 정치>에 실린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미련을 짚 정리할 수 있었고, 더불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방침에 대한 회의로 인해 정치에 대해 가져왔던 방관자적 태도 또한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막연히 품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기능을 못 하고 있고, 2020년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됩니다. 바닥이 어디일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는 거대 여당이 등장했고, 민주노총은 가장 존재감 없는 총선을 치렀습니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방향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 그리고 대통령선거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막연한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주소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준 봄호였습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봄호 「정의당 이대론 안 된다」 필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을 평가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보였던 정의당의 행보를 민주당 2중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가 되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애초에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한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한 대목에서는 뭔가 외장창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정책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다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꿈같은 일이고 사회변혁은 구호로만 여겨지다가, 촛불투쟁이라는 전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이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저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경제정책, 근거 없는 경제정책이라는 평가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원래 보수 세력 혹은 좋게 봐주어 자유주의 세력이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권의 본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고,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질책하고 견인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다시금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긍정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을 올리려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반드시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늘 있었습니다.

독자에게

김동근(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정의당 이대론 안 된다」 원고에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진보적인 측면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에 실패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상황을 되짚어보면, 소득주도성장전략을 둘러싼 논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정책의 측면, 즉 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전략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재분배가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소득주도성장전략의 핵심은 첫 번째 측면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소득(임금) 상승 → 인건비 상승 → 이윤 하락 → 자본에 가해지는 이윤 압박 → 기술 개발 → 자본생산성 상승 → 이윤 상승 → 성장]이라는 경로를 통해 소득(임금)상승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입안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에서도 간략하나마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주장에는 경제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이론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주류 경제학 이론 체계에도 없는 이단적 주장인데요, 그래서 실제 소득주도성

장전략 초기에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전략을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그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현재 모두가 확인하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실화된 2018년 들어 경제가 오히려 하강 국면을 그리게 되고 2019년 경제는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집니다. 문재인 정권과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입장이 곤란해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전략의 효과 중 두 번째 쟁점을 둘러싼 연구들이 발표됩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애초 소득주도성장전략이 천명했던 핵심 목표가 소득재분배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최저임금인상(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고에도 서술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지지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1월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으나 총고용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논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결과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전략에 대한 자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원고의 [각주2]에 서술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했던 학현학파의 주요 학자들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반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학현학파의 평가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적절한 자본 투자를 통해 높은 소득을 높은 생산성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전략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전략을 포기한 것이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거나 ‘개혁성’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득주도성장전략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 ‘개혁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다”거나, 나아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는 식의 비판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비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적 근거도 없는 낙관적 의지주의로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시도했다가 경제성장에도 실패하고 소득재분배에도 실패한 무능한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성장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경제성장에 실패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전략이 의미가 있으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재분배에는 도움이 되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재분배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임금) 상승 → 인건비 상승 → 이윤 하락 → 자본에 가해지는 이윤 압박 → 기술 개발 → 자본생산성 상승 → 이윤율 상승 → 성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설과는 달리 실제로는 [최저임금 상승 → 인건비 상승 → 이윤 하락 → 고용시간·고용인원 하락,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 혹은 [최저임금 상승 → 인건비 상승 → 이윤 하락 → 폐업]의 경로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시간당 임금은 증가할 수 있지만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로가 이것입니다.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둘러싼 여러 논

란이 많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전략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소득재분배 양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자영업의 상당수는 자본가라기보다는 자가고용노동자 혹은 반(半)실업자에 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전략은 소득재분배에도 실패하긴 했지만,) 어떤 정책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나아가서 꼭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측면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먼저, “꼭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의 성장·발전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풍요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산·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윤획득의 가능성’에 따라 생산·투자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조건, 즉 생산·투자를 통해 이윤이 원활히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자본은 생산·투자를 중단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윤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본이 생산·투자를 줄이는 상황이 ‘성장 둔화’라는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겪어온 경제위기의 모습입니다. “성장하지 않더라도 있는 자원으로 사이좋게 나눠서 잘 살면 되지”라는 바람과는 달

리,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자본이 생산·투자를 중단함으로써 초래되는 소득 감소가 빈자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당연하지요.

요컨대 “경제성장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거나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정책 중 “성장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전략이 경제정책으로 낙제점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성장”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사회를 향한 운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사회가 자본주의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의 모습을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생산물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잉여가치(이윤)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즉 성장이 중단된 사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풍요·발전, 교육·의료·행정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 생산시설의 감가상각을 메우기 위한 자원 등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생산물을 모두가 나눠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이윤)를 어떻게 쓸지 자본이 결정한다면, 대안사회에서는 잉여가치를 어떻게 쓸지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이윤)의 사용원리가 “더 많은 이윤 창출”라면 대안사회에서는 잉여가치의 사용원리가 사회의 발전·풍요라는 것입니다.

추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하여 덧붙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최

저임금 인상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에 “최저임금을 사회정책에서 경제정책으로 격상시킨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의 의미에 대해 조금 부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최저임금(인상)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각종 복지제도처럼) 사회정책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최저임금이 경제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경제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올린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달성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집권 86세대」의 포퓰리즘」 필자에게

이조운(건설노조 경인본부 조직부장, 사회진보연대 회원)

무엇이 그 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게 할까요. 21대 총선 결과를 보며 5년 전쯤 대학 정치학 수업에서 했던 토론이 생각났습니다. ‘젊으면 더 도전적이라서 진보적’이라는 ‘연령’ 이야기로 이어졌었습니다. (무엇이 진보이고 보수냐는 논의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세대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6세대 비판은 86을 분석/비판할 뿐 아니라 세대를 분석하는 틀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질문에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게 되는 맥락을 80년대의 정치적 경험과 그 이후의 경제적 수혜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선거 결과를 바라보면서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30~40대가 50대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습니

다. 통상 같은 세대인 50대가 더 민주당을 지지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86세대 전반의 경제적 배경과 86세대 정치인들의 이해가 특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86세대가 공유하는 정치적 성향은 말 그대로 경제적 이해와 관계없이 '성향'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주는 동질적인 정치 성향이 의미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후세대가 86세대 정치인들을 더 선호하게 만든 원인이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으면 더 진보적'이라는 통념과 달랐던 이번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후에는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벌어졌던 주요 정치 사건과 경제적 굴곡이 각 세대의 정치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독자에게

김태훈(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네. 질문하신 86세대 일반의 선거투표 성향에 대해서 저는 이번 글에서 특별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권 86세대의 특징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죠. 86세대 전반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참고할만한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정당 지지나 투표 성향에 대한 통계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치 성향에 있어서 86세대의 코호트 효과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 한상익, 김정훈, 최종호, 「86세대, 균열인가? 허상인가?: 86세대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 평화연구 27(1), 2019. 4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총선 이전에도 이미 86세대의 투표 성

향은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정치지형을 ‘지역 균열’에서 ‘세대의 이념적 균열’로 대체한 주역이라 평가받기도 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86세대의 실종과 소멸’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6세대 내에서도 다시 전반부와 후반부 학번을 분리해 비교해보거나, 전대협 간부와 간부가 아니냐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비교하는 등 여러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만으로 86세대 일반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투표나 정당 지지, 이념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정치 성향과 동일시하는 것도 사실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결론에 ‘성장기 끝물에 재벌, 공공부문에 입사한 중산층 60년대생의 경제적 사익추구와 민주당 집권 86세대의 정치적 사익추구가 때로는 서로 견제하지만, 때로는 영합하는 방식으로 기묘하게 결합하는 것 아니냐’는 가설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생(40대), 80년대생(30대)은 이러한 공모에 일정하게 참여하면서 60년대생을 추종하는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에도 세대를 30년 단위로 나누는 분석이 있습니다.) 90년대생(현재 20대) 다수는 이러한 공모에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향을 띄는 것 같고요. 또한 20대도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균일하지 않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세습 중산층 사회』는 90년대생 내에도 ‘N포세대’와 조국 전 장관의 자녀로 상징되는 ‘G세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습’이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더 상세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 역사로 살펴본 민주당 정치의 위험성」 필자에게

임정석(《계간 사회진보연대》 구독자)

이 글은 지난 겨울호에서 지적했던 ‘반(反)보수뿐인 개혁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보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정치세력의 계보가 각 경제위기의 시기마다 보였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면 그들의 근본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들어 모두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며, 민주당의 타락한 포퓰리즘이 우연한 일탈이 아님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경고해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중요함을 새삼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반복되고 더욱 심화될 반보수전선에 대한 미망에서 노동자·사회운동이 비로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민주당 정치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 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경제위기 시기에 대한 설명을 제한된 글 내에서 읽다 보니, 내용상에서 한 가지 의문 및 고민이 남습니다. 1979~80년 중화학공업화의 모순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기 야당의 경제학적 문맹으로 인한 어설픈 신자유주의 흉내를 지적하는 글의 논지가 자칫하면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논지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 실패로 소급되는 야당 세력의 관치경제 철폐와 자유시장 강화라는 경제노선이 재벌개혁 없는 금융세계화로 의 편입으로 이어졌고,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집권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족으로 전략하게 되었음을 요지로 파악하면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독자에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임정석님께서 주신 질문에 짧게 답변해보겠습니다. 1979~80년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경제는 1970년대부터 침체 상태에 진입했고, 박정희가 육성한 중화학공업 기업들은 가동률 저하, 기술 부족 등으로 줄도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의 무분별한 기업 대출과 정부의 경기 부양 탓에 인플레이션도 높았습니다. 금융 제도를 정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했고, 한계기업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에는 사회주의적 변혁이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냐는 양자택일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서유럽도 복지축소에 나선 상황이라 복지국가 같은 중간 선택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 이후부터 소련도 경제위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체제가 국가자본주의로 굳어진 상황이라 사회주의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즉, 사회주의적 변혁의 길도 봉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글은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지배 엘리트 분파 사이의 태도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 남아 있던 선택지는 어떤 과정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냐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전두환은 개혁을 광주 학살로 상징되는 엄청난 폭력을 동반해 진행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 않지만, 만약 김영삼, 김대중이 단결해 군부 쿠데타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명확한 정세 판단으로 빠르게 경제 개혁에 나섰다면, 1980년의 광주 학살과 더 나아가 1997년의 외환위기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글에서도 자세히 썼듯 1997년 외환위기는 1980년대 미완에 그

친 경제개혁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독재와 IMF에 의한 구조개혁의 대가는 당연히 민중의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양김에게도 있습니다.



「혁신 없이 거품만 조장하는 혁신성장정책」 필자에게

강동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부장, 사회진보연대 회원)

1. 금융규제가 필요한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만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대중적으로도, 금융화의 진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규제가 어떤 정책수단 혹은 방향에서 단기적으로라도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2. 코로나 19 이후 국면에서 실물부문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격이 금융부문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술혁신의 곤란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이나 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자에게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1. 먼저 금융규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증권사

가 단기조달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금융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금융 규제정책은 대부분 미봉책일 뿐입니다. 정부도 대중들도 어떻게 금융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일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나와도 그걸 우회하는 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물론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아예 없으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한 금융 규제는 실현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융화 현상의 토대에는 이윤율 저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윤율 저하 국면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이윤이 잘 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도 드뭅니다. 그래서 자본가들도 금융에 투자하고 노동자들도 생산 과정보다는 금융 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금융화 현상을 역전시키려면 과거 1, 2차 산업혁명과 맞먹을 정도의 새로운 산업혁명이 등장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선택지 모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세계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민주당의 허구적 혁신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2.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물부문 충격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방식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금융위기가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국 연준의 빠른 대응으로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습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업 파산입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채나 기업 대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회사채를 보유하거나 기업에 대출해 준 투자펀드, 증권회사, 연기금, 보험사 등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담보부증권(CLO)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안전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 금

용위기가 폭발할 수 있고, 은행이 파산하는 은행위기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기업이 파산하지 않게 막대한 양의 회사채를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무제한 지속될 순 없습니다. 연준이 쏟아 붓는 막대한 양의 달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의해 지탱됩니다.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이 자본 흐름을 유지하지 못할 때, 연준의 무제한 수량완화 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의 확보는 중요한 일입니다. 산업혁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나, 논리적으로 도출된 난제에 대한 연구에는 전혀 투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문이 제대로 발달하긴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투자해도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1930~1960년대 미국, 유럽, 일본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 규모나 산업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합니다. 둘째, 지금은 기술혁신이 과거보다 더없이 정제된 상황이라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틀 내에서 최대한 기술혁신에 힘쓴다고 가정하면, 경제발전을 목표로 금융적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금융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혁신성장 모델에서는 과학자에게 기술혁신의 대가로 금융수익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기반으로 벤처를 창업합니다.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국가가 앞장서서 주가를 올려줍니다. 과

학자들은 벤처기업의 주주이기 때문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획득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학자들이 주식부자가 되기 위해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만 연구합니다. 둘째, 주가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어서, 기술 없는 창업이 빈발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

